

*사설 같은 주장

캄보디아 사태, 국가의 딜레마

최근 캄보디아에서 불거진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및 살해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 이슈를 넘어, 국가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온라인 사기 조직에 의해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의 피해자가 되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정부의 대응은 '뒷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이미 2~3년 전부터 현지 교민사회와 언론의 경고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취업을 미끼로 유인된 청년들이 여권을 빼앗기고 범죄에 동원되거나 고문까지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당국과 치안 시스템은 '국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들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가 수백 건으로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주캄보디아 대사 자리는 수개월째 공석이었으

며, 현지 공관의 영사 조력은 미흡했다는 피해자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고려할 때, 이는 '예고된 참사'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

이러한 늦장 대응에 대해 한 경찰학과 교수는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 부재, 대응의 소홀함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초국경 범죄의 새로운 양상에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60여 명을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난주 송환된 64명의 범죄 피의자는 국내 도착 즉시 경찰에 압송됐으며,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은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 온라인 스캠, 보이스피싱 등 조직형 범죄에

연루된 자국민을 최대 2,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송환된 64명은 말 그대로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셈이다.

송환 과정에서 또 다른 딜레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송환된 이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인 동시에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 보호'라는 대의 아래, 범죄 혐의자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진정한 국민 보호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출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에서 국위를 손상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두 가지 책임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정부가 '귀국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일자리 부족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고수의 일자리' 유타에 넘어간 청년들의 척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재난 및 범죄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늦장 대응의 빌미를 제공한 외교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 해소, 재외공관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경찰청 외사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다.

또한, 해외 거점의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민 안전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과 새로운 범죄 패러다임에 맞춘 실질적 대응만이 국가가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쪼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재정립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문가 칼럼

판·검사들 잇단 일탈...사법개혁 자초

이완재 이슈인팩트 발행인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그것도 3명씩이나 근무 시간인 대낮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노래방을 찾아 소동을 벌인 일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의 일탈과 추태는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들 중 일부 판사는 재판 중인 사건 수임변호사와의 부적절한 접대 및 교류로 재판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자체감사 및 징계가 이뤄졌으나 경고 주의 조치에 그쳤다. 여론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6개월 정직 또는 견책 등 중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

결국 이들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 대상이 됐으나 그나마도 한 명만 출석해 두 명은 법적 조치가 예고됐다.

이번 일은 최근 빈번한 여타 판·검사들의 비리·비위와 위법 등 일탈의 연속선이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인식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을 다루는 판사가 이 같은 일탈을 저지르고도 주의성 경고 조치만 받았다는 것이다. 일반인이었다면 엄중한 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 쉬쉬 하려다 외부에 공개되자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



▲판·검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법개혁을 자초하는 일이다. ©pexels

기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시에 법복을 입은 법관의 특권(예외)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사법부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관으로서 품위와 명예, 책

임의식 모두 훼손한 법치질서 문란이라 할 수 있다. 국가기강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고, 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그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되레 법과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삼는다면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

스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착공'이라는 절차를 서둘렀다. 아직 의료기관 참여나 구체적인 대형 종합병원 설립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착공한 것에 대해 실질적 진전보다 정치적 이벤트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많다. 시민 입장에서는 '병원 없는 메디컬클러스터'가 어떤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파주시가 내세우는 '100만 자족도시' 비전이다. 현재 파주시 인구는 약 54만 명 수준으로, 향후 10~15년 내 100만 명을 목표로 한다지만 그 근거는 모호하다. 의료·산업·교육·문화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도시 규모만 키우겠다는 것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이미 주거·교통 인

프라 포화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다. 이 상황에서 "의료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도시"라는 구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GTX-A 개통, 운정3지구 개발 등 굵직한 도시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핵심 기능인 의료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다. 물론 도시 발전을 위해 비전 제시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은 수사(修辭)가 아니라 실현의 문제다. 착공식의 화려한 리본 커팅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엇을 채워나갈지에 대한 로드맵이다.

'100만 자족도시'라는 말은 도시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형 종합병원 없는 도시, 신뢰 없는 행정으로는 결코 다가설 수 없다. 파주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전보다 현실을 먼저 직시하는 냉철한 행정이 필요하다.

*기자랩톱

대형 종합병원 없는 '100만 도시'

최근 파주시 서패동 일원에서 열린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메디컬클러스터) 착공식'은 주목을 받았다. 수년간 표류하던 사업이 드디어 속도를 낸 듯 보였고, 현장에는 정치권 인사들과 지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은 "메디컬클러스터를 통해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의료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파주시를 100만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화려한 비전이 담긴 말이지만, 정작 현장의

분위기는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더 컸다. 이 사업의 핵심은 단연 대형 종합병원 유치다. 파주는 수도권 북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믿고 찾을 만한 대형 종합병원 하나 없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고양시나 서울시로 가는 등 시민들은 타지역 대형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것이 바로 '메디컬클러스터' 구상이다. 하지만 유력했던 아주대학교병원이 메디컬클러스터 진출 계획을 철회하면서 상황은 어려워졌다. 병원이 빠진 메디컬클러